

경제성장이론의 최근 동향과 정부정책의 역할

이 자료는 *The Economist*誌(1996. 3. 9 ~ 15)에 게재된 『Mystery of Growth』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최근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국가간 경제성장 격차의 원인을 신고전파 성장이론 및 내생적 성장이론 등을 통해 살펴 보고,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편집자주)

1. 경제성장의 중요성

經濟成長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경제학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빈곤은 지상에서 가장 큰 불행의 원천으로서 이러한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經濟成長이다. 물론 경제성장이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이 이미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혼잡 공해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나, 이에 따른 고통은 경제적 낙후로 인해 세계의 많은 빈국들이 당하고 있는 빈곤의 폐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끄럽게도 그 동안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를 소홀히 다루어 왔는데, 1980년대까지 수십년 동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정책 등 경제성장 이외의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는 199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R. Lucas 등을 비롯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Lucas는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는 한 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주제를 거들떠 보기가 어렵게 된다면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초기 경제학자들도 경제성장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A. Smith는 『國富論』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분업,

자본축적 및 기술진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을 제공했다. A. Smith는 이 저서에서 시장내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률체제를 강조하는 한편, 자유무역체제를 통해 빈국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세기 초 D. Ricardo는 경제성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인 收穫遞減(*diminishing returns*)의 법칙을 공식화하고, 토지에 대한 추가적 투자의 수익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멈추게 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2.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의 주요 내용

현대 경제성장 이론의 기초는 1950년대 R. Solow와 T. Swan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의 경제성장 모형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이 늘어나면 산출량도 늘어나지만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신고전파 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은 두가지의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자본이 축적되면서 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축적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전파 성장이론은 기술진보를 단순히 모형 밖에서 결정되는 外生變數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는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에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빈국은 부국보다 성장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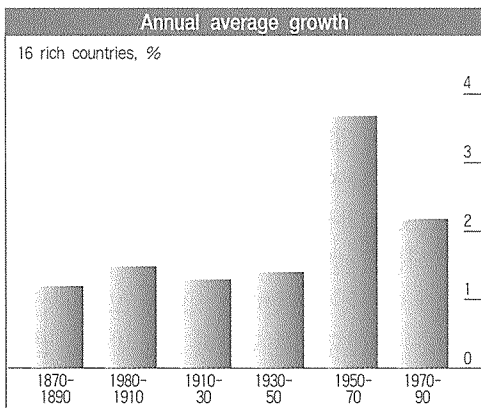
3.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한계 : 이론과 실제

장기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이와 같은 이론적인 시사점들은 현실경제와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70년대 이후 16개 부국의 평균경제성장률 자료(그림-1 참조)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이들 국가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초기의 장기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여 첫 번째 시사점과 배치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과 이론의 괴리현상은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설명될 수 있으나, 이는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범위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60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중 118개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과 1960년의 1인당 국민소득간의 산포도(그림-2 참조)를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빈국일수록 성장속도가 빠르게 된다는 두 번째 시사점과 상충한다.

〈그림-1〉 연간 평균성장률



〈자료〉 "Economic Growth" by Robert Barro & Xavier Sala-i-Martin,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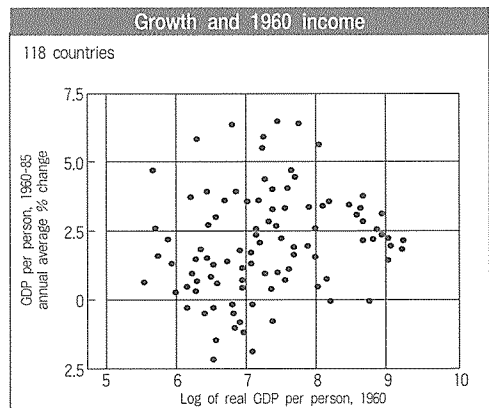
4. 기존 자본개념을 확대한 신경제성장이론의 등장

신고전파 경제성장 이론 이후 30여년동안 경제성장 문제는 경제학에서 다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들어 新經濟成長理論(new growth theory)의 등장으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론은 무엇보다 신고전파 성장이론이 가정했던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기술진보가 없더라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P. Romer는 기존의 자본 개념에 노동력에 체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포함한 인적자본을 확대·적용함으로써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이 그 설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쓰게 된다면, 혹은 설비투자에 따른 자본 축적의 부산물로서 기업활동이 더욱 혁신적(innovative)이 된다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신경제성장론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술진보 없

〈그림-2〉 성장률과 1960년 소득 비교



어도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왜 현실적으로 주된 경제활동의 하나인 기술진보를 이론에서 배제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5. 기술혁신과 내생적 성장이론

최근 신경제성장이론의 또 다른 조류인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은 기술진보를 모형 안에 內生化한다. 이 이론에 대해 다른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이 어떤 유인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를 하며, 어떤 경로를 통해 한 기업의 기술혁신이 경제의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경제성장이론은 신고전파 성장이론이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불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다.

기업은 만일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거나, 최소한 일시적이라도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기술혁신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생적 성장모형에의 기술혁신 도입은 비정상이윤(*abnormal profit*)을 배제하고 있는 완전경쟁과 상충한다.

따라서 신경제성장이론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조건하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술진보가 경제학자들의 경제 성장에 관한 사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한편 최근 경제성장이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경제성장이론은 인적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노동개념을 세밀하게 정의해 놓는데 불과하며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개념이 적절하게 조정된다면 신고전파 성장이론도 신성장이론의 주요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 있으므로 신경제성장이론이 신고전파이론에 추가한 것은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6. 정부정책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비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이나 신경제성장이론 모두 경제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정부정책을 제외시켰다는 점이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다. 두 이론 모두 수확체감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최근 방대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의문을 해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한편, 신고전학과와 신경제성장이론이 지닌 상대적 장점들도 밝혀 내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왔다. 이 실증분석은 10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중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을, 출산율, 취학률, 정부지출, 법치의 효율성 정도 등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 실증분석 결과 얻어진 중요한 발견중의 하나는 새로운 실증분석 연구의 선구자인 R. Barro가 이름을 붙인 조건부 소득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으로서, R. Barro의 연구에서는 만일 각국의 출산율, 인적자본, 정부정책등의 변수들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빈국일수록 부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기본적인 관점이 옳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의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는 등 다른 요소들은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수렴(*absolute convergence*)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을 실제 추월한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정책 등 따라잡기 과정에서의 「상대적인」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경제변수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는 자유시장정책, 특히 무역자유화와 재산권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J. Sachs와 A. Warner

는 111개 국가를 대외개방도에 따라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의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개방경제일수록 폐쇄경제에 비해 더욱 빠른 성장 및 소득수렴을 보여주며, 또한 작은 정부일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R. Barro는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물적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1960년대 동아시아 신흥국가의 高成長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낮은 수준의 물적자본을 지적했다.

경제성장에 있어 투자와 저축의 중요성은 더욱 어려운 문제인데, 신고전파이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높은 투자율은 성장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자 자체만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어 투자와 성장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신고전파 성장이론에 따르면 높은 투자율은 투입요소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성장의 원인이 되나, 반대로 높은 성장이 보다 높은 저축과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다. 예컨대 공산국가의 경우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투자를 기록했지만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해 높은 성장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

이밖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은데,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정치적 불안정성도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주주의 채택여부의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일지라도 부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가능성은 국내외에서 경쟁(competition)과 유인(incentive)에 대해 보다 큰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에 의해 최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7. 올바른 정책방향에 관한 논쟁

적절한 정부정책이 높은 성장을 지속케 할 수 있다는 신성장이론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의 감소가 바람직하다는 신고전파 성장론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는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순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빠른 성장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극명하는데,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1960년대의 무역 자유화와 낮은 정부지출을 동아시아 기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개입 옹호자들은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및 투자촉진정책 등을 이들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신고전학파와 신성장이론 등 경제성장모델들이 서로 우호적인 접근을 하는 최근의 화해 분위기를 반영하여, 이러한 모순은 외관상 나타난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P. Krugman 교수에 의해 잘 알려진 A. Young의 논문에서는 아시아 신흥국가의 성공은 대부분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는 이들 국가의 성장이 높은 투자에 의한 급속한 자본축적, 그리고 빠른 인구성장과 노동참여에 의한 노동력 증대 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따라잡기(catch-up)의 한 사례일 뿐 기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한편 신경제성장이론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성공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바,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성장은 인적자본을 증대하고 물적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성장이론이 가장 적합하였느냐와 동일한 뜻이 되겠지만, 이들 국가의 어떤 정책이 더 중요했느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는 있지만, 특정 분야의 투자를 지원하는 微視政策이 아시아에서 成長의 動因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반면 교육장려, 외국기술에 대한 개방,

교역축진, 세율인하 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정책이 아시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8. 정부정책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보는 또다른 시각

1950년대의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이 Romer의 이론과 함께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 異論의 여지가 없으나, 兩 이론 모두가 정부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건부 수렴에 관한 새로운 실증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으나, 때때로 이러한 문제가 도외시 되어 왔다.

M. Olson은 지금까지의 성장이론이 내포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Olson은 세계에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들은 빈국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소수 집단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신고전파 성장이론과 신성장이론 모두가 경제성장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omer의 신성장이론에 의하면 가장 부강한 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하여야 하나 실체는 그렇지 않으며, 또한 기본적인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Olson은 양 성장이론이 모두 자원과 기술을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자원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 성장이론은 자원이 변하지 않는다면 산출 역시 변화할 수 없음을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Olson은 가난한 나라들은 자원의 대부분을 낭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같은 나라들이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은 적절한 자원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Olson은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빈국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빈국에서 부국으로 대규모 이주가 실현되는 경우, 빈국에 남겨지는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자본과 토지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노동력의 이동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

새로 정착하게 된 이주민의 소득도 기존 성장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이주지에서 새로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거 본국에서 인적자본, 기업가정신 등을 포함하는 노동력이 낭비되었음을 반증한다.

Olson은 그 밖에도 대다수 빈국의 경우 資本과 知識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經濟政策과 制度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키는 세계적인 경제성장 형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조건부 소득수렴에 의한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빈국은 따라잡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신흥국가들이 보여 주었던 빈국의 경제성장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빈국의 문제는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존자원의 부적절한 이용에 있었던 것으로, 1989년 이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사회주의 국가를 보더라도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실증적인 결과를 놓고 새롭게 고민을 해야 할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이다. ♣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96-1>